

우면산 성뒤마을에 940호 공공주택

내년 공사 착수... 2022년 완공 계획
행복주택 357호·분양주택 583호

서초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자락에 위치한 '성뒤마을'에 940호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올해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에 착공, 오는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공공주택인 행복주택 357호, 분양주택 583호(공공 177호, 민간 406호)로 구성됐다.

서초구 방배동 565-2일대 성뒤마을은 1960~70년대 강남개발로 생긴 이주민 정착 마을이다. 수십 년간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화재·산사태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체계적인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2017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선정하고, 현상공모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토지이용계획도.

/서울시

아울러 시는 성뒤마을 인근을 우면산 자연, 남부순환도로 주변 교육·문화공간과 연계해 20~30대 유동인구 기반의 일자리 준비 공간을 형성할 계획이다. 비주거시설은 연구와 교육, 생산, 창작 등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주거시설은 생산기능과 교류거주기능이 합쳐진 새로운 유형의 거주 건

물로 만든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지구계획 승인 이후 보상·이전을 올해 완료하고 2020년에는 단지 조성·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며 "2022년엔 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서초구에 역세권 청년주택 생긴다

공공임대 68세대·민간임대 212세대

서울 서초구에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4일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강남권 역세권 청년주택에 서초구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1997년 건립된 노후 골프연습장을 철거한 자리에 지하 4~지상 12층, 총 28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건물은 지하 4~2층 주차장, 지하 1~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12층 청년주택으로 구성됐다. 공급 세대수는 공공임대 68세대, 민간임대 212세대 등 총 280세대다.

시는 지난해 10월 11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시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지하철, 국철, 경전



서초구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서울시

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의 역세권 지역에 들어선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초구에서도 첫 번째로 건축허가를 얻은 것은 강남권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청년주택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성과공유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동반성장 R&D신청 가점 등 18개
확산 위해 도내 공기업 대상 설명회

경기도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경기 도정의 핵심인 공정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도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성과공유제 민간 확산과 더불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 익공유제' 도입 관련과 정부 동향 및 제도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하도급계약, 위·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현재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따라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아태평화번영 국제대회 개최식.

/경기도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공식 출범

평화협력정책·DMZ보존 활성화 등
정책수립 위한 의견 수렴·자문 기능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남북 평화정책 자문기구인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공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앞으로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비무장지대(DMZ)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필

요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평화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맡는다.

도 관계자는 "평화정책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수를 30명 내외로 구성했다"며 "당연직 공무원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한반도 평화 통일, DMZ 보존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기도의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평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및 의제 발굴을 통해 경기도 통일기반 정책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서울시, 시정협치형 사업에 78억 투입

시민 제안으로 선정된 30개 사업
내년 100억 규모... 내달 중순 신청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시민 투표에 의해 선정된 30개 사업의 실행을 위해 '시정협치형 사업'에 77억8000만원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부서와 속의 과정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 추진 결과를 시민과 집행부서가 협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시민과의 협치를 행정 문화로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시민참여예산 중 일부를 시정협치형으로 편성, 시민과 함께 실행해왔다. 올해 사업비는 총 77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43억5000만원에 비해 83% 늘었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계획수립, 실행, 평가 등 사업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민관협치를 보장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민관협의체는 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사항에 대해 민관 공동숙의와 의사결정, 공동평가를 수행하는 기구다. 사업계획서 수립, 성과 목표 설정, 사업 추진 공동 의사 결정 등을 수행한다.

올해에는 복지, 장애인, 청년, 아동, 교통, 기후, 생태, IT 등 시민 접점에서 이뤄지는 3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내년 사업 규모는 100억원이며, 시는 2월 중순부터 시정협치형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사업은 속의에 기반하고 사업의 제안뿐만 아니라 실행에도 민간 제안자가 참여하는 등 속의민주주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속의과정을 내실화해 시민참여예산이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발표

노인 10명 중 2명 '독거노인'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2명은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8일 시에 거주하는 노인 3034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5조에 근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노인 중 22.4%는 혼자 살고 있었다. 노인으로부터 구성된 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39.3%였다. 총 61.7%가 응급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집에서 고독사할 것 같다고 답한 노인(18.4%)은 10명 중 2명이었다.

독거 노인 중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3%밖에 되지 않았다. 노인의 8.3%는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수발, 간호, 육아 등의 형태로 돌봄을 지원하고 있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신분당선 연장노선 역사 변경 요청

경기도는 '고양 지축지구'에 입주하는 도민들의 이동 편의 확보를 위해 '서울 용산~고양삼송 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 내 역사 1곳의 위치를 지축지구 인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 측에 강력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은평뉴타운 주민은 물론 고양 지축지구 도민들까지 함께 역사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축교' 인근으로 역사 위치를 옮기는 내용의 '노선 변경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 사업비 부담 불가 의사를 통보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알리

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총노선연장 구간 18.47km 중에는 경기도 구간 3.3km가 포함돼 있어 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도와의 별도 협의 절차 없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고양 지축지구'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축교 인근(도보기준 450m)에 역사를 설치해달라'는 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김승열 기자